

문 대통령 “日, 대단히 무모한 결정... 큰 피해 감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이 각(閣議·국무회의)을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대한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무슨 이유로 변경하든, 일본 정

화이트리스트 배제 따른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향후 책임 日에 있던 점 분명히 경고... 명백한 보복 양국 관계 중대한 도전... 국제사회 지탄 면치 못할 것”
 “극일 의지도 언급... “다시는 日에 지지 않을 것”
 “지금의 도전, 기회로”... 국민들에 힘 모아달라고 당부

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경제노동 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극일(克日) 의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에게 맞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

로 오히려 큰소리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도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단합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어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가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여야 “우호관계 근간 훼손”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국회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28명 전원 찬성 의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날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네 가지 사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국회는 이날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수출 규제를 강행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뉴시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 카풀법·기업활력 제고법 등 민생경제 법안 141건 처리

국회가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등 141건의 민생경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에 대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개정안도 처리됐다. 모두 택시·카풀 사회적 대화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 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 5조8269억 규모
정부 원안보다 8568억 줄어
日 무역보복 대응·강원 산불
미세먼지 등은 원안보다 증액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산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 미세먼지·산불 등 재해재난 예산이 포함된 총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저녁 예결소위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의결됐다.

이는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99일 만에 통과된 것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107일(2000

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묵은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에서 1조3876억원을 감액하고 5308억원 증감함으로써 8568억 원 가량 줄어든 5조8269억원의 규모로 확정됐다.

일자리 예산 등 경기대응 예산 약 1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의 '빛더미 추경' 반대로 국제 발행은 3066억원 삭감했다.

대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피해, 노후수수도 교체 예산, 지하철 공기업 개선 분야 등 재해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5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여야는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